

노트북 가격 급등에 '허걱'...새학기 학부모들 속탄다

램 가격 상승에 컴퓨터 등 2배까지 치솟아 전적 문의하고 구매 주저 지역 전자상가 특수 실종...구형 PC 뜯어 부품 파는 '램테크' 현상도

새 학기를 앞두고 컴퓨터 메모리(RAM)와 SSD(저장공간) 등 PC 핵심 부품 가격이 급등하면서 대학·대학원 입학생과 학부모들의 PC·노트북 구매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대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램 가격이 단기간에 크게 뛰었다. 컴퓨터 등 가격이 2배 가까이 뛰면서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자녀들에게 컴퓨터를 사주기 겁난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중고 컴퓨터 부품을 팔아 돈을 버는 '램테크'(램+재테크)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18일 광주지역 맘카페와 SNS 등지에서는 '요즘 노트북 가격이 너무 비싸다', '얼마에 구매했느냐', '차라리 기존 컴퓨터를 수리해서 버려야겠다' 등 컴퓨터 가격에 대한 글이 잇따라 게시됐다.

대학생 커뮤니티 앱 '에브리타임'에도 '며칠 새 가격이 90만원 올랐다', '램값이 떨어질 기미가 없

어 구형 태블릿으로 버틴다'는 등 노트북 사기가 겁난다는 글이 이어지고 있었다.

삼남매를 키우는 조은희(여·45)씨는 "초등학생 딸의 태블릿과 대학 입학하는 딸 노트북을 알아보고 있는데, 가격이 이렇게 비싼 줄 몰랐다. 가격이 100만원도 아니고 200만원대까지 치솟아 부담이 크다"며 "보급형을 살지, 중학교 진학 후 학교에서 노트북이 지급될 때까지 기다릴지 고민 중이다"고 토로했다.

대학원 입학을 앞둔 김가영(여·33)씨도 "대학원 진학 이후 쓰려고 노트북을 알아봤는데 원하는 모델 가격이 200만원을 훌쩍 넘어 살 엄두를 못 내고 있다"며 "명절 이후 신학기 수요가 지나면 가격이 내려갈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컴퓨터 업계 등에 따르면 데스크톱 PC는 지난해 150만원 선에서 구매할 수 있었던 제품이 최근 280만원 안팎까지 오르며 2배 가까이 뛰었고, 사무

용 노트북도 40~50만원대 제품이 70~80만원 선으로 20~30%가량 인상됐다.

최저가 비교 사이트 분석 결과 피씨스토어(조립용 PC) 데스크톱(32GB)은 1년 전 133만원에서 254만원으로 90%가 올랐다. 삼성전자 갤럭시북4(256GB)도 현재 최저가로 87만여원에 판매되고 있지만, 1년 전 56만여원에서 56%가 인상됐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새학기를 맞은 지역 전자상가도 특수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노트북이 신제품을 중심으로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명절 용돈 등을 모아 '큰마을 먹고' 구매하기에도 부담스러운 수준이 됐고, 매장을 찾는 발길도 눈에 띄게 줄었다는 것이다.

고덕현(54)씨는 "구매를 하더라도 신제품보다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기존 제품을 찾는 경우가 많다"며 "메모리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예전보다 20~30만원의 더 들어 용량이 작은 제품이나 저렴한 모델 위주로 구매한다. 신학기 특수가 사라지다 보니 기업 등 고정 거래처가 있는 상가들은 그나마 낫지만, 신규 입점 업체들은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고

털어냈다.

심지훈(60)씨도 "기존 제품과 새로운 모델의 사양 차이가 크지 않은데도 가격은 1.5배 가까이 뛰었다. 수요가 몰리면서 기존 모델들의 가격도 동반 상승하는 추세"라며 "손님들이 과거에는 기본 메모리에 메모리를 추가 장착하는 식으로 업그레이드를 많이 했지만, 가격이 오르면서 이러한 움직임은 찾아보기 어려워졌다"고 귀띔했다.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는 구형 PC를 뜯어 램을 팔거나 중고 불량 확보 경쟁이 붙는, 이른바 '램테크' 현상이 불붙고 있다. 더 가격이 오르기 전에 중고품이라도 사려는 사람들과, 구형 램을 판매해 수익을 얻는 등의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날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 등에서는 중고 램 매물을 판매한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삼성 DDR4 4GB 노트북용은 2만원에 판매글이 올라왔고, 삼성 DDR4 8GB 단품은 5만원, G.Skill(지스킬) DDR4 8GB는 두 개 9만5000원, 삼성 DDR4 8GB 두 개 12만원 등에 가격대가 형성됐다.

SK하이닉스 DDR4 8GB는 두 개에 13만원, 비티즈 DDR4 8GB 네 개를 일괄 20만원대로 판매하

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들은 2026년 1분기 범용 D램과 낸드 가격은 기록적인 폭으로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TrendForce)는 최근 전망에서 1분기 D램 계약가격이 전 분기 대비 90~95%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낸드(NAND·비휘발성 메모리) 계약 가격은 55~60%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분석과 함께 추가적인 상황 조정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광주시 북구 용봉동에서 PC 부품 판매·수리점을 운영하는 40대 A씨는 "지난해 8~9월 8만~10만원 하던 메모리 가격이 현재는 최대 40만원까지 올랐다"며 "이 영향으로 데스크톱과 노트북 가격도 전반적으로 크게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메모리 가격이 5월까지 계속 오르다 최고점을 찍은 뒤 향후 3년간 높은 가격대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윤준명 기자 yoon@kwangju.co.kr

① 내란죄 ② 사형 선고 ③ 출석 여부

오늘 윤석열 '운명의 날'...재판 포인트

출석 거부해도 공판 절차는 진행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일으켜 내란을 시도한 혐의에 대해 사법적 판단을 받게 됐다.

내란 관련 재판의 중심이 되는 '본안' 사건에 대한 첫 선고 공판이자, 1996년 전두환씨 이후 30년 만에 내려지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판결이다. 특히 이번 재판은 12·3 비상계엄의 성격과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처벌 수위 등을 결정하는 재판으로서 향후 내란 관련 재판의 향방을 가늠 분기점으로 꼽힌다.

◇내란이냐=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선고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봐야 하는지 여부'로 예상된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비상계엄의 목적과 구체적인 실행 양상이 모두 내란 요건을 충족한다고 봤다. 계엄을 선포한 목적으로 국회를 무력화하고 별도의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해 헌법상 국민주권, 의회, 정당, 선거관리 제도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할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다.

계엄 선포 후 무장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해 출입을 통제하고 정치인을 체포하려 한 점도 '폭동'에 해당한다는 것이 특검 판단이다.

더욱이 앞선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대한 중요임무 중사 혐의 재판에서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면서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못박기도 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야당의 정부 주요 인사 풀 단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한

상징적 조치였을 뿐 실제로 군정을 실시해 국헌을 문란케 할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하고 있다. 국회가 해제 요구를 의결하자마자 군을 철수시키고 계엄을 해제하는 등 '경고성 계엄'을 했다는 취지다.

◇사형이냐=윤 전 대통령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았는지 여부도 주목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법정 형은 사형·무기징역·무기징고 세 가지 뿐이다.

더불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하면서 "과거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전두환씨보다 중하게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과거 전두환·노태우 세력을 단죄한 역사를 무시하고 '공직 엘리트'들이 내란을 획책해 비극적 역사를 반복했다는 점, 향후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친위쿠데타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 시도가 다시 반복될 위험성이 적지 않다는 점 등에서도.

과거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경우 1996년 내란 혐의 등이 모두 인정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 받았다. 내란에 동조한 노태우씨에 대해서는 내란 중요임무 중사 등 혐의가 인정됐지만, 구형량보다 적은 징역 22년 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에 나오냐=윤 전 대통령이 선고 공판에서 출석을 거부하더라도 공판 절차는 진행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선 공판 과정에서 건강상 사유를 들어 여러 차례 출석하지 않았고, 일부 절차는 권석으로 진행됐다.

형사소송법상 선고 공판은 피고인의 출석을 원칙으로 하지만, 구속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피고인 없이도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앞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주변에 경찰 버스가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

오는 23일 법관 정기 인사가 예정돼 있다는 점도 선고를 쉽게 미룰 수 있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공판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변호인단은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불출석할 계획이 없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정치자금 5억 브로커에게 제공 "국회의원에 전달 안돼 처벌 불가" 배용태 전 전남부지사 1심 무죄

배용태 전 전남도 행정부지사가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영암군수 후보 공천을 받게 해 달라며 '선거 브로커'에게 5억원의 정치자금을 건네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재성)는 지난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배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선거 브로커' A(62)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다. 정치자금을 마련하고자 횡령을 저지른 사업가에게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배 전 지사는 지난 2022년 6월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선후보자 지위 보장, 공천 등을 대가로 A씨에게 5억원의 현금을 제공, 전남·전북 지역구 국회의원 2명에게 전달해 줄 것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언론사 근무 경력을 앞세워 국회의원들과의 친분을 바탕으로 전달하겠다고 배 전 지사로부터 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배 전 지사가 A씨에게 건넨 선거 자금이 실제 의원에게 전달되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으로 봤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미수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 설명이다.

A씨에 대해서는 전달받은 정치자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쓴 만큼 사기 혐의를 인정, 일부 유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배 전 지사는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해 달라고 A씨에게 돈을 줬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A씨는 전달자일 뿐이므로 정치자금법에 대해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유연재 기자 yjyou@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린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Green Premium Vera Gold

-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능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 유통전문판매원 : (주)그린알로에 ■ 소비자상담실 : 080-234-6588

그린 알로에